

#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 정책과 미중관계 전망

최우선



이 글은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에서 매주 개최되는  
주요국제문제분석 세미나에서의 논의를 참고로 하여 저자가 작성한 것입니다.

세미나일자 2017. 12. 29.

발 표 최우선 안보통일연구부 교수

토 론 김현욱 미주연구부 교수

신상진 광운대학교 교수

발 행 일 2018년 1월 10일

발 행 처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편 집 이진원 연구원

디 자 인 역사공간

발간등록번호 11-1261021-000001-03

##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우)06750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72

<http://www.ifans.go.kr>

E-mail: [ifans@mofa.go.kr](mailto:ifans@mofa.go.kr)

이 문건은 집필자의 견해를 바탕으로 '열린 외교'의 구현과 외교정책수립을 위한  
참고자료로 작성된 것으로서 외교부의 공식입장과는 무관한 것입니다.

#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 정책과 미중관계 전망

## CONTENTS

문제 제기	01
냉전 이후 미중관계	03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 정책	06
미중관계 전망	12
정책적 함의	16



---

## 1. 문제 제기

»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후 1년 동안 북핵문제 해결을 우선적 과제로 인식하고 중국과의 본격적인 갈등을 유보해 왔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대중 정책의 방향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음. 특히 최근 발표된 ‘국가안보전략 (National Security Strategy)’은 정부 보고서로서는 드물게 직설적으로 미국의 대중 정책의 논리와 방향을 제시함.

» 미국의 대중 정책이 1990년대 중반 이후 지속되어 온 포용(engagement)과 헤징(hedging)을 결합한 전통적 정책에서 벗어나 보다 강경한 정책으로 변화할 것인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적 내용을 가질 것인지를 판단하고 미중관계를 전망하는 것은 향후 한국외교의 전략적 환경을 평가하는데 있어 대단히 중요함.

» 트럼프 행정부는 현실주의적 국제정치관에 기초해 중국을 미국의 지배적 지위에 도전하는 전략적 경쟁자로 보다 분명하게 규정함. 그리고 아시아에서의 패권국가의 등장을 막고 유리한 세력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군사력 증강과 보다 공정한 무역 경쟁을 통해 중국을 보다 강하게 견제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음. 한편, 이러한 세력균형 논리와 함께, 트럼프 행정부는 당면한 공동의 이익을 위한 중국과의 협력의 필요성을 인식함.

● 트럼프 행정부는 이전 행정부에 비해 보다 경쟁적인 정책을 선호하는 것으로 판단됨. 향후, 강력한 도전자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군사적·외교적 노력을 강화하고 상대적 경제 이익의 손실을 줄이기 위해 상당히 강한 무역 압력을 가할 것으로 전망됨.

● 이러한 경쟁적인 정책은 변화하는 세력균형과 미국 지도부의 보다 분명한 현실주의적 인식을 반영함. 하지만 이는 여전히 냉전 이후 미국이 추진해온 현실주의적 대중 헤징 전략의 연장선에 있음.

---

트럼프 행정부의 경쟁적인 대중정책은  
변화하는 세력균형과 미국 지도부의 보다  
분명한 현실주의적 인식을 반영함  
하지만 이는 여전히 냉전 이후  
미국이 추진해온 현실주의적  
대중 헤징 전략의 연장선에 있음

---

● 그리고 지역안정 유지에 대한 미·중의  
전략적 공동 이익, 경제적 상호의존, 글로벌  
이슈들에 대한 공동 대응의 필요성은 양국이  
여전히 협력의 기초를 유지하게 만드는  
강력한 요인이 될 것임.

» 본 보고서는 냉전 이후 미중관계를 평가한  
후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 정책을 분석할 것임.  
이에 기초해, 미중관계를 전망하고 한국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할 것임.

---

## 2. 냉전 이후 미중관계

» 소련의 붕괴와 함께 1972년 이후 지속된 세력균형 논리에 기초한 미국과 중국의 암묵적인 대소 동맹관계가 자연스럽게 일반적인 국가 관계로 전환됨.

» 클린턴 행정부는 1993년부터 1994년 초까지 천안문 사태 이후 중국의 인권 상황을 비판하면서 중국의 인권문제를 MFN 지위 연장과 연계함으로써 미·중 간 상당한 긴장 관계가 형성됨.

- 하지만 중국의 저항과 관계 악화를 경험한 후, 클린턴 행정부는 1994년 5월 두 이슈의 연계를 철회하고 새로운 대중 정책으로 전환함.

» 클린턴 행정부가 1994년 결정한 대중 정책은 관여(engagement)와 헤징(hedging)을 결합한 복합적 정책임.

- 클린턴 행정부는 대중정책을 관여 정책으로 부르고 중국을 경제적·제도적으로 국제사회로 통합해 건설적 관계를 발전시킨다는 자유주의적 논리로 정책을 설명함. 하지만 실제 클린턴 행정부가 결정한 대중정책은 부상하는 중국의 미래 의도의 불확실성에 대비하여 군사력과 동맹체계를 강화해 힘의 우위를 유지하는 한편, 포용을 통해 가능한 한 중국의 위협 인식을 완화해 중국의 도전 가능성을

---

클린턴 행정부가 결정한 대중정책은 부상하는 중국의 미래 의도의 불확실성에 대비하여 군사력과 동맹체계를 강화해 힘의 우위를 유지하는 한편, 포용을 통해 가능한 한 중국의 위협 인식을 완화해 중국의 도전 가능성을 줄이거나 지연시키는 것이 미국의 유일강대국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는 최선의 방법이라는 현실주의적 논리에 기초해 있음

---

---

줄이거나 지연시키는 것이 미국의 유일강대국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는 최선의 방법이라는 현실주의적 논리에 기초해 있음.

● 클린턴 행정부는 이러한 대중정책과 함께 일본에 대한 안보보장을 재확인하고 동맹을 강화하는 나이 이니셔티브(Nye Initiative)를 추진해 동아시아에서의 군비 경쟁을 방지하고 안정을 유지하는 아시아 정책을 수립함.

≫ 중국 역시 장기적인 경제발전에 초점을 맞춘 도광양희의 대전략을 추진하면서 주변 정세의 안정을 위해 미국과의 협력관계를 유지하는데 우선순위를 부여함.

≫ 클린턴 행정부의 대중 정책 기조는 이후 행정부의 교체에도 불구하고 초당적 합의에 기초해 지속되어 옴.

≫ 부시 행정부는 초기 중국을 경쟁자로 규정했지만, 점차 포용과 헤징을 결합한 정책으로 전환함.

● 9/11 이후 중국과의 대테러 협력의 중요성이 부각됨.

● 또한, 부시 행정부 내에서 점차 포용과 헤징을 결합한 정책이 미국의 전략적 이익에 부합한다는 합의가 형성됨.

● 부시 행정부의 대중 정책 조정 과정의 예처럼, 트럼프 행정부 역시 일정한 상황 변화에도 불구하고 내부 논의와 경험을 통해 미·중이 공유한 현상유지에 대한 이익을 인식할 것임.

● 이에, 미국은 향후 여전히 중국과의 협력을 위주로 하면서도, 점차 견제를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음.

≫ 오바마 행정부는 중국과의 협력적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아·태 지역에 전략적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견제 강화를 통해 중국을 자제시키면서 동맹국 및 파트너 국가들을 안심시키려는 재균형(rebalancing) 전략을 추진함.



---

- 중국의 빠른 부상에 따른 세력균형의 변화, 특히 중국의 반접근/지역거부(A2/AD) 능력의 증강이 경쟁을 증대시키는 주요 원인임.

- 한편, 2009년 이후 중국의 공세적인 외교 행태가 미국의 보다 강한 견제를 유발해 온 또 다른 원인임.

≫ 중국 지도부는 미국에 대한 힘의 열세를 분명히 인식하고 있고, 따라서 미국의 견제를 완화하기 위한 유화적 대미정책을 추진해 옴.

- 한편, 중국은 국력 증대와 시진핑 주석 개인의 성향을 반영하면서 소위 핵심이익을 보다 강하게 주장하고 경제력을 이용해 주변국가 및 지역질서에 대한 영향력 확대를 시도하는 공세적인 외교행태를 보여 왔음.

≫ 따라서 냉전 이후 미국과 중국은 지역 안정과 현상유지에 대한 공동의 전략적 이익에 기초해 기본적으로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해 옴.

≫ 하지만 미중관계는 협력의 기초를 유지하면서도 세력균형의 변화와 함께 점차 경쟁이 증대되는 양상을 보여 옴. 양국은 최근 본격적인 경쟁의 초기 단계에 진입함.

---

## 3.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 정책

### 가.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 정책관

- ▶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기간부터 중국에 대해 대체로 일관된 정책적 선호를 드러냄.
  - 사실상, 대선 기간 그가 언급한 중국에 대한 인식과 정책적 선호는 최근 발표된 ‘국가안보전략’의 대중 정책관과 대체로 일치함.
  
- ▶ 대선 기간, 트럼프는 중국이 야심이 강한 경쟁자이고 불공정한 거래를 통해 미국에 경제적 손실을 입히는 국가라는 인식을 보여줌.
  - 트럼프는 중국을 다루기 위해서는 강력한 힘의 우위를 유지해야 한다는 현실주의적 시각이 강했음. 이를 위해, 그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유지하는 것이 그의 외교전략 접근법의 첫 번째 기초라고 주장함.
  - 트럼프는 중국을 미국 경제를 농락하고 일자리를 빼앗아 가는 주범으로 강하게 비판하고, 이에 대한 보복을 공약함.
  
- ▶ (현실주의적 국제정치관) ‘국가안보전략’은 트럼프 행정부의 국제정치관을 ‘원칙적 현실주의(principled realism)’라고 지칭함. ‘국가안보전략’은 세계가 여전히 대단히 경쟁적이고 미국은 끊임없이 힘의 우위를 강화해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고 평화를 유지해야 한다는 전형적인 현실주의적 인식을 보여줌.
  - ‘국가안보전략’은 미국의 가장 중요한 전략 목표는 세계의 주요 지역이 하나의 국가에 의해 지배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유리한 세력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관건임을 분명히 함.
  
- ▶ (유일강대국으로서의 미국) ‘국가안보전략’은 냉전 이후 형성된 미국을 유일강대국으로 하는 단극체제가 점차 보다 경쟁적인 체제로 변화되고 있다는 위기감을 강조하면

---

서도, “미국이 필적할 수 없는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기술적 우위를 갖고 있다”고 평가함.

» (경쟁자로서의 중국) ‘국가안보전략’은 중국을 전략적 경쟁자로 명시함.

- 다 나아가, 장기적인 패권 추구 의도를 강조하면서 중국을 ‘수정주의(revisionist)’ 국가로 규정하고, “중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을 대체하려 하고 있고...자신에게 유리하게 지역질서를 재편하려고 한다”고 평가함.

» (현실주의적 대중 정책 논리) ‘국가안보전략’은 과거 미국의 대중 정책이 중국을 국제제도와 경제로 통합한다면 중국이 선한 행위자가 되고, 믿을 수 있는 파트너가 될 것이라는 자유주의적 가정에 기초해 있었다고 비판함.

- ‘국가안보전략’은 이러한 자유주의적 믿음은 오류로 판명이 났고, 미국은 유리한 세력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모든 국력의 도구들을 활용해 경쟁해야 한다고 주장함.
- 과거 미국의 대중 정책에 대한 이러한 비판은 과장되어 있음. 1990년대 중반 이후 지속되어 온 미국의 대중 정책은 중국을 포용하고 국제사회로 통합해 현상유지 국가로 만든다는 자유주의적 논리가 결합되어 있지만, 포용을 통해 역내 군비경쟁을 제어하는 한편 군사적 우위를 유지하면서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비하는 현실주의적 논리가 더 지배적인 지침이었음. 그리고 세력균형의 변화에 따라 2010년 이후 재균형 전략이 추진되면서 헤징의 논리가 더 강화됨.
- 따라서 트럼프 행정부가 보다 일관된 현실주의 논리에 따라 대중 헤징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지만, 이러한 변화가 자유주의적 대중 정책에서 현실주의적 대중 정책으로의 전환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과장된 평가임.

---

트럼프 행정부가 보다 일관된  
현실주의 논리에 따라 대중 헤징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지만,  
이러한 변화가 자유주의적 대중 정책에서  
현실주의적 대중 정책으로의 전환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과장된 평가임

---

≫ 한편, ‘국가안보전략’은 중국과의 협력의 현실적인 필요성을 인정함. 중국의 의도가 고정된 것이 아니고 “미국은 상호 이익이 되는 영역들에 걸쳐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언급함.

- 하지만 현실주의적 관점에서 “미국은 최고의 군사력을 확실히 하고, 동맹국들 및 모든 수단과 완전히 통합되게 함으로써 힘의 우위에 기초해 경쟁자들과 협력의 영역들을 찾을 것이다”라고 언급함.

≫ (군사력 강화) ‘국가안보전략’은 중국의 도전에 대응해 미국이 힘의 우위를 지키기 위해 군사력 증강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함.

- ‘국가안보전략’은 중국이 위기 시에 미군이 서태평양으로의 자유로운 접근을 거부하고 작전의 위험을 높이는 군사력을 증강하면서 미국의 우위를 잠식하고 국제 질서를 재편하려 한다고 지적함.
- 이에 대응해, 미국은 혁신적인 군사력을 개발하고, 전투준비 태세를 강화하면서, 충분한 규모의 군사력을 확보해 막강한 위치(overmatch)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함.
- 또한, 억제력을 유지하고 위기 시 신속한 접근을 위해 아시아에서 군사력의 전진 배치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함.

≫ (동맹 및 파트너십 강화) 집권 이후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과 ‘국가안보전략’의 동맹에 대한 지침은 대선 기간 트럼프 후보가 보여준 정책적 불확실성을 해소함.

- ‘국가안보전략’은 중국에 대응해 유리한 세력균형을 유지하는 데 있어 동맹국들과의 협력과 인도·베트남·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싱가포르 등 파트너 국가들과의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함.
- 특히,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일본·인도·호주의 4자 협력의 중요성이 강조됨.

≫ 한편, “국가안보전략”은 한국 및 일본과의 통합된 지역미사일방어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언급함.

---

» (공정한 무역 경쟁) ‘국가안보전략’은 장기적인 경쟁을 위한 경제력 강화를 강조함. 이를 위해 미국 국내 경제를 활성화하고, 공정하고 상호적인 국제경제 체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함.

- ‘국가안보전략’은 “미국은 국가들이 불공정한 이익을 얻기 위해 규칙을 위반할 때 시정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언급함.
- 공정한 경제관계에 대한 강조는 중국의 불공정 무역이 미국의 일자리를 뺏어가고 제조업을 파괴한 주범이라는 비판적 인식에 기초해 있음.
- 또한, 중국과의 증가하는 경제력 경쟁과 상대적 지위 하락 속에 미국의 경제적 지위를 강화하기 위해 상대적 이익 배분의 메커니즘을 변화시키려는 인식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나. 트럼프 집권 후 미중관계 전개 양상

»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을 포용하면서 군사적 우위를 강화하는 대중정책의 기본 방향을 유지해 옴.

-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까지 대중 정책에 대한 체계적인 논리와 방향을 제시하지 않았지만, 오바마 행정부에서 추진하던 기존의 정책을 대체로 유지하고 있음.

- 행정부와 의회 내에 복합적인 대중 정책에 대한 초당적 합의가 존재함.

» 현재 트럼프 행정부는 북핵 문제 해결을 우선적 과제로 인식하고, 이를 위해 중국과의 협력을 강조하고 갈등적인 정책들을 잠정적으로 유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특히, 무역 보복은 대북 제재 강화를 위한 레버리지로 사용되면서 유보됨.

---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을 포용하면서  
군사적 우위를 강화하는 대중정책의  
기본 방향을 유지해 옴

---

---

현재 트럼프 행정부는 북핵 문제 해결을  
우선적 과제로 인식하고, 이를 위해  
중국과의 협력을 강조하고  
갈등적인 정책들을 잠정적으로  
유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 따라서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 정책의  
구체적 내용은 상당 부분 아직 실행되고  
있지 않지만, 중국에 대한 강한 위협 인식과  
경쟁의식에 기초해 트럼프 행정부는 우선  
중국과의 군사력 경쟁에서 장기적으로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국방비의 대규모  
증액을 추진함.

● 최근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서명된 2018  
년도 국방수권법안(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은 전체 국방예산을 전년도에 비해 14% 늘어난 6,920억 달러로  
증액함. 특히 기본 예산(base budget)은 전년도와 비교해 20%가량 늘어난 6,260억  
달러로 증액됨.

» 국방부를 중심으로 군사력의 아시아로의 재배치가 점진적이지만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해군력은 재배치를 통해 이미 전체 전력의 60% 정도가 아시아에 배치됨.
- 공군력 역시 F-35 등 첨단 전술기와 정보 자산을 중심으로 재배치가 지속되고 있음.

» 집권 초기의 우려와 달리, 트럼프 행정부는 아시아 지역의 전략적 우선순위를 유지하면서 기존의 동맹체계를 확고히 하고 인도 등 새로운 파트너 국가들과의 안보협력을 강화하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음.

- 특히, 최근 아시아 순방을 계기로 트럼프 행정부는 인도-태평양 구상을 제시함.  
향후 이러한 개념적 구상이 어떻게 구체화될지 불확실하지만, 미국·일본·호주·인도  
중심의 지역동맹의 연대 강화와 해양 지배력 강화가 주요한 내용이 될 것으로 판단됨.

---

» 미국의 우위를 분명히 인식하고 있는 중국 지도부는 미국의 견제를 완화하기 위해 유화적 정책을 유지하고 있고, 트럼프 집권 이후 갈등을 피하기 위해 남중국해의 군사화 등에 있어 좀 더 조심스러운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하지만 견제를 최소화하려 노력하면서도, 시진핑 정부는 중국의 강대국화를 목표로 군사력 강화, 주변지역에 대한 영향력 증대, 지역 질서의 점진적 재편을 추진하면서 미국에 대한 도전을 점차 증대시켜 옴.
- 따라서, 중국의 유화적 정책에도 불구하고, 중국에 대한 미국의 전략적 우려는 지속적으로 증가되어 옴.

» 한편, 중국은 북핵문제 및 무역과 관련해 수세적으로 대응해 왔지만 사실상 미국이 원하는 수준의 양보를 회피하면서 상황을 관리하려 함.

- 여전히 북한 정권의 안정유지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중국은 북핵문제의 심각성과 압박 강화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원유금수 조치를 회피하고 평화적 해결을 강조함.
- 무역 불균형 해소를 위한 100일 계획에 합의하고 잠정적으로 갈등을 지연시킴.
- 현재 미국과 중국은 예상보다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

미국의 우위를 분명히 인식하고 있는  
중국 지도부는 미국의 견제를 완화하기  
위해 유화적 정책을 유지하고 있음  
하지만 견제를 최소화하려 노력하면서도,  
시진핑 정부는 중국의 강대국화를  
목표로 군사력 강화, 주변지역에 대한  
영향력 증대, 지역 질서의 점진적 재편을  
추진하면서 미국에 대한 도전을  
점차 증대시켜 옴

---

---

## 4. 미중관계 전망

### 가. 단기 전망

---

트럼프 행정부는 이전보다 강경한 대중 정책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지만, 전략적 환경이 근본적으로 변화하지 않은 상황에서 1990년대 중반 이후 지속되어 온 포용과 해징을 결합한 대중 정책의 기본 방향을 변화시키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됨

---

» 트럼프 행정부는 이전보다 강경한 대중 정책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지만, 전략적 환경이 근본적으로 변화하지 않은 상황에서 1990년대 중반 이후 지속되어 온 포용과 해징을 결합한 대중 정책의 기본 방향을 변화시키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됨.

» 미국의 정책결정자들의 인식과 함께, 객관적인 전략 환경이 향후 미국의 대중 정책을 강력하게 규정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임.

» 1990년대 중반 이후 미국의 정책결정자들은 중국을 포용하면서 미국의 군사적 우위를 극대화하는 대중 정책에 대한 강한 합의를 유지해 옴.

● 미국의 복합적인 대중 정책은 기본적으로 세력균형 논리에 기초해 있음. 부상하는 중국의 미래 의도가 불확실하고, 따라서 미국의 합리적 선택은 힘의 우위를 유지하는 한편 포용을 통해 가능한 한 중국의 위협 인식을 완화해 중국의 도전 가능성을 줄이거나 지연시키는 것이라는 현실주의적 논리에 초당적 합의를 유지해 옴.

» 미국의 강한 힘의 우위가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중국이 급격한 군비증강을 통해 미국에 직접적인 군사적 도전을 시도할 가능성은 대단히 낮음. 미국 역시 힘의



---

우위에 기초한 포용을 통해 현상을 유지하는 전략을 버리고 중국에 대한 봉쇄를 추진해 중국을 본격적인 군비증강으로 몰아가는 것은 오히려 또 다른 강대국의 등장을 가속화하고 군사적 충돌의 위험을 증대시킬 것임.

» 따라서 지역안정에 전략적 이익을 공유한 양국은 갈등의 수준을 관리하고 협력의 기초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됨.

- 경제적 협력 관계가 안정유지의 동기를 강화할 것임.
- 양국은 또한 기후변화·핵확산·핵안전·사이버 안보·테러리즘·보건 안보 등 국제적 이슈들을 해결하는 데 이익을 공유함.

---

따라서 지역안정에 전략적 이익을 공유한 양국은 갈등의 수준을 관리하고 협력의 기초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됨

---

» 하지만 세력균형의 변화와 트럼프 행정부의 보다 강경한 정책적 선호가 결합되어 미국은 점차 군사력 증강과 역내 대중 안보협력을 강화할 가능성이 높음.

- 트럼프 행정부는 국방부 주도로 중국의 A2/AD 전략을 극복하기 위해 정밀 장거리 타격무기, 자동화된 무인무기 체계, 전자무기 등 첨단 군사기술을 활용한 미래무기 개발 중심의 군사전략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됨.
- 트럼프 행정부는 중동 지역에서의 대규모 군사개입을 자제하면서, 해군력을 중심으로 아시아로의 군사력의 점진적인 재배치를 지속할 것으로 예측됨.
- 기존의 역내 동맹국 및 인도·베트남·싱가포르·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 등 파트너 국가들과의 안보협력 강화 노력은 트럼프 행정부에 의해서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트럼프 행정부는 또한 중국의 해양 진출에 대응해 남중국해에서의 항해의 자유 작전 등을 강화하면서 중국에 대한 압박을 강화할 것으로 보임.

»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해 유보되어 온 무역 압력도 강화될 가능성이 높음.

● 향후 중국은 북한의 안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가능성이 있는 경제제재에 반대할 가능성이 높고,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과의 금융·무역 거래를 전면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세컨더리 보이콧 형태의 대북 제재를 가할 가능성이 높음.

●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가할 수 있는 수준의 무역전쟁을 시도하지는 않겠지만 중국에 대한 상당한 수준의 경제적 압력을 통해 자신의 정치적 지지 기반을 유지하고 중국의 성장을 견제하려 시도할 것으로 예상됨.

» 중국은 미국의 증대되는 군사적·경제적 압력을 완화하고 무역 회복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기본적으로 유화적인 대미 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됨.

● 한편, 외교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한국·베트남·인도 등 최근 갈등을 겪은 주변국들에 대해 보다 온건한 정책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음.

» 유화적인 대미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중국은 미국의 경제적 압력에 대해서는 상당히 강하게 대응하고, 영토 이익을 수호하려 할 것으로 보임.

● 한편, 전략적으로 중국은 강대국으로 부상하기 위해 해군력을 강화하고 경제력을 바탕으로 주변국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면서 역내 질서를 점차 보다 주도적으로 재편하려 시도할 것으로 전망됨.

● 강화된 국력에 대한 자신감에 기초한 중국의 적극적 외교는 자연히 중국의 전략적 의도에 대한 미국의 우려를 증대시킬 것임.

» 따라서, 세력균형의 변화와 함께 부상하는 중국에 대한 미국의 견제 강화와 상호 경쟁 증대의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세력균형의 변화와 함께  
부상하는 중국에 대한 미국의  
견제 강화와 상호 경쟁 증대의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

## 나. 장기 전망

» 장기적으로, 중국은 안보 강화를 위해 자신의 세력권을 확장하면서 미국을 서태평양에서 배제하는 전략을 추구할 가능성이 높음.

» 미국은 아시아에서 패권국가의 등장을 저지하는데 사활적 이해를 갖고 강한 대중 견제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장기적으로 높은 수준의 미·중 간 안보경쟁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군사력 우위와 주요 역내 국가들의 반중 동맹이 세력 균형을 유지하고 중국을 자제시킬 것으로 예상됨.

---

## 5. 정책적 함의

### 가. 미·중간 협력 기조의 유지

» 세력균형의 변화로 인한 경쟁 증대의 양상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향후 10여 년 간 미국의 힘의 우위 하에 미·중 간 협력 기조가 유지될 것임.

- 미국은 압도적인 군사력을 바탕으로 상당히 오랜 기간 힘의 우위를 가진 역외 균형자 역할을 지속할 것이고, 이는 아시아 지역체제의 전반적인 안정을 유지시키는 가장 큰 요인이 될 것임.

---

미·중 경쟁의 증대는 자연히 한국 외교의 딜레마를 가중시킬 것임  
하지만 여전히 미·중 간 협력의 기조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한국이 한미동맹과 중국과의 호혜적 관계를 함께 발전시킬 외교적 공간이 존재할 것임

---

» 미·중 경쟁의 증대는 자연히 한국 외교의 딜레마를 가중시킬 것임. 하지만 여전히 미·중 간 협력의 기조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한국이 한미동맹과 중국과의 호혜적 관계를 함께 발전시킬 외교적 공간이 존재할 것임.

### 나. 한미동맹의 전략적 우선순위

» 지리적으로 근접한 중국의 강대국화는 한국에게 장기적으로 잠재적 위협이 될 가능성이 존재함. 한국은 중국과의 협력을 유지하면서, 장기적인 전략적 관점에서 중국의 부상에 따른 불확실성에 대비해 조용하게 헤징(hedging)을 추구할 필요가 있음. 역외 균형자인 미국과의 동맹 강화는 헤징의 핵심이고, 따라서 한국은 대북 억제와 장기적인 헤징을 위해 한미동맹에 분명한 전략적 우선순위를 부여해야 함.

---

## 다. 점진적인 지역 연계성 강화

» 한국은 전략적 이익을 공유한 일본·인도·호주·베트남 등과의 안보협력을 점진적으로 추진하면서 미래 협력의 기반을 놓고, 미국을 중심으로 한 지역 동맹체제의 연계성을 강화해야 함.

- 이러한 연계성 강화는 지역안정에 기여하면서, 미래에 한미동맹에 대한 미국의 방기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음.

» 인도-태평양 구상에 따라 한국이 4개국 안보협력에 동참하라는 미국의 요구가 있을 경우, 한국은 공식적인 참여는 피하면서 현재 수준의 협력 강화 속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함.

-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전략적인 소통을 통해 미국과 한국의 대중 인식을 공유하는 것이 중요함. 현재 한국의 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북한문제와 장기적인 안보를 위해 중국과의 호혜적 관계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미국에 강조해야 함.

## 라. 비핵화 로드맵 합의 주도

» 북한 핵문제에 대한 미·중 협력은 제한적 원금 수출 금지 수준까지 강화될 가능성이 있음. 현 조건 하에서는, 북한의 핵개발 의지를 꺾기 위해 대북 제재 강화에 초점을 맞춰야 함.

» 강력한 압박을 유지하면서 일정한 시점에서 재개될 대화에서 강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포괄적 협상을 시도할 필요가 있음.

- 현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향후 재개될 대화에서 제시될 협상안을 미국과 긴밀하게 조율하는 것임. 포괄적 인센티브 패키지에 대한 미국의 정책은 아직 완성되어 있지

---

않음. 한국이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음. 미국과의 합의를 기초로 중국 등과의 전략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함.

● Forward-loaded 되고 시간표에 따른 북미 관계 정상화, 평화체제 구축, 강력한 경제협력 등이 상당히 강한 인센티브가 될 수 있을 것임.

## 마. 독자적 미사일방어 체계 유지

➤ 한국은 현재로서는 ISR 협력을 중심으로 미국·일본과의 미사일 방어 협력을 발전시키면서 독자적인 지휘·통제 체계를 갖는 하층 방어 위주의 독자적 미사일방어 체계를 발전시키는 것이 바람직함.

# CONTRARIA SVNT COMPLEMENTA

상반되는 것은 보완적인 것이다







